어떻게 증액한 광주·전남 예산인데…

여야 4대강 예산안 협상 결렬… 한 단독처리 가능성

상임위 늘린 지역예산 물거품 우려… 특단대책 절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대강 예산 절충을 위한 접촉을 가졌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800억원 삭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일부는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전액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민주당은 수공 예산 3조2천억원 가운데 보 설치와 강바닥 준설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는 4대강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 등에서 증액된 광주·전남지역 국고 예산 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민주당 수석 부대표인 우윤근 의원은 "24일 협상을 해봐야 알겠지만 현 상태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계수조정소위 구성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은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 일정도 예산안 타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감액과 증액 심의에는 최소한 각기 3~4일 정도가 필요한데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의 충돌 등을 고려한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야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광주·전남지역 국고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처리하게 된다면 상임위에서 증액된 지역 예산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F1(포뮬러 원) 경주장 건설 지원 예산이나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 광주 U대회 지원 예산 등 상징성이 큰 지역 예산은 한나라당 측에서 호남 민심을 고려해 반영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증액된 지역 예산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일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한나라당 예결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역구 예산 확보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 모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여야 간의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나라당 예결소위 위원들에게 지역구 예산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4대강을 끝까지 반대했다는 명분과 예산 반영의 실리를 얻고 한나라당도 4대강 사업 예산 확보라는 전리품을 챙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 해도 광주·전남지역의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에는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에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tuim@kwangju.co.kr

민주당의 예결위 점거농성 7일째인 23일 오후 심재철 예결위원장이 예결위 회의장을 찾아 민주당 의원들에게 위원장석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 김진애(왼쪽 앞)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래 "4대강, 영수회담으로 풀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3일 4대강 문제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제안했던 3자 회동 아니면 정세균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해 문제를 풀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왜 여당 대표 뒤에 숨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안타깝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의 4대강 예산 협상과 관련 "수자원공사의 사업은 명백한 대운하 사업이므로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면서도 "국토해양부의 3조5천억원 대해선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운하 의심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보 규모를 줄이고 보 높이를 낮추면서 준설량을 대폭 줄이자는 여야 중진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한나라당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대운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명숙 수사에 '정세균 관련설' 잇따라

민주 당혹감속 예의주시

산자부장관 시절 연루설 정세균 대표 결백 주장

민주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정세균 대표의 이름이 연이어 오르내리자 당혹감 속에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물론 "여권 인사 수사에 대한 물타기 시도"라고 반발하고는 있지만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여의도 정가에는 확인되지 않는 정 대표 추가 관련설이 끊임없이 양산되며 민주당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정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2006년 11월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정 대표의 지시로 이원걸 당시 2차관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대한석탄공사 사장 지원을 권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굳은 표정으로 "공소장 내용을 입수, 검토를 해 혹시 할 말이 있으면 차후에 발표하겠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 인사는 "사실 무근으로, 특정인의 일방 진술에 근거한 검찰의 논리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안성 골프장 로비 의혹이 제기된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한 여권의 작품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석탄공사 사장 추천권 행사는 정세균 대표가 장관 재임 시절에 한 것이 아니라 후임 장관이 석탄공사 사장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정세균 장관 시절에는 석탄공사 사장에 대한 심사 개시도 이뤄지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공작이며, 공작정권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태 전개에 따라 정 대표 개인과 민주당이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온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잡음이 나지 않는 것은 자칫 자중지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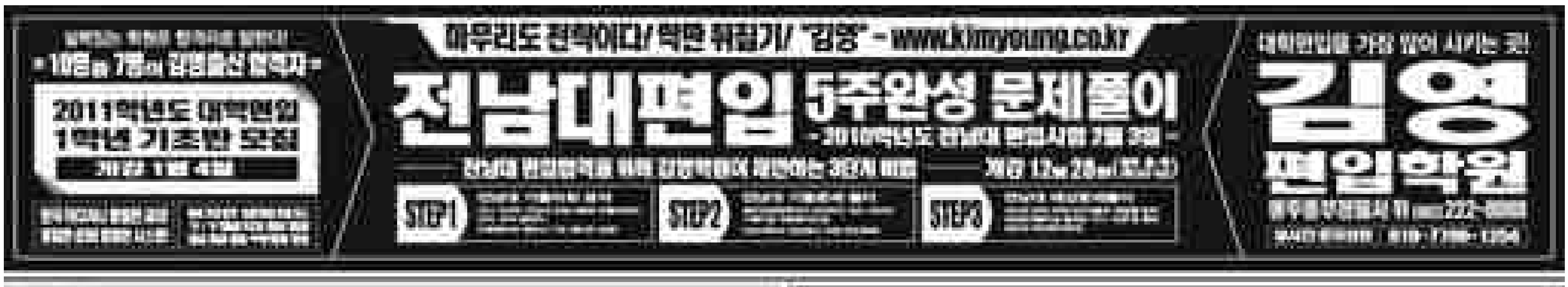
하지만, 한 전 총리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 대표의 이름이 계속 거론될 경우 비주류 측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경우 비주류와 수도권 입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조기 전대론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盧 전대통령 영결식 소란 민주당 백원우 의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의원은 지난 5월 29일 서울 경복궁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이 진행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의원에 대해 형법상 '장례식 등 방해죄'를 적용했다.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초 시민 전모씨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연합뉴스